

특별면호  
7호

2008년 10월 6일

# 저항의 촛불

The Candlelight Resistance

www.resistcandle.com

반전 | 반신자유주의 | 노동자 투쟁

‘다함께’(www.alltogether.or.kr)의 주간신문 <저항의 촛불>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값 800원

# 부자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구해야 한다

## 부자 증세·복지 확충·임금 인상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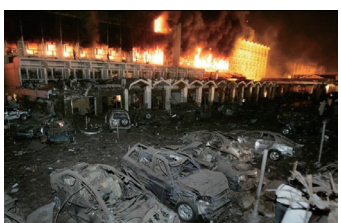
- 특집 —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전환점을 맞은 미국 4면

트로츠키에게 배우는  
'불황과 계급투쟁'의 관계 8~9면

전 세계로 번지는 위기 5면
-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3면



총체적 난국에 처한  
'테러와의 전쟁' 9면

미친 교육을 중단하라  
—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 2면



멜리민 파동과 이윤 체제 7면

실천연대 마녀사냥 중단하라 16면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6면

### 긴급 토론회

##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는가?

일시 10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연사 장시복(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저자)

주최 : 다함께  
참가비 : 3천 원  
문의 : 02-2271-2395



www.resistcandle.com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저항의 촛불> 온라인 기사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해적 소탕을 핑계로 군사적 대응을 주장  
하는 소제국주의적 야욕을 고발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인용해도 될까요?”

“땅볼리스 돈볼리제”

－ 이명박 정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는 한 네티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 게 나온다. … 중부세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국민 중 3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감면해 줘야 한다.”

－ 한나라당 정몽준

“요즘 보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식의 극단적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정규직화 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는 얘기를 돌려 표현한 것 아닌가.”

－ 노동·착취’부 장관 이영희

“30세 미만 젊은이에게만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자는 식으로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 이영희의 막말 2

“금융자본의 투기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 …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시장의 큰손들에게 물매를 맞을 수도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

－ 노무현, 그래서 배신했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 “옛날식 강경일변도 아당보다 분명히 각을 세울 때 세우고 협력할 때 협력하고 대안을 세우는 아당이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초당적 협력?

“지난날 심심하다 싶으면 터져 나오곤 했던 그 혼한(?) ‘간첩사건’을 지난 10년간 거의 구경해 보지 못했다. 그러니 그 ‘동네’가 신바람이 나서 일할 리가 없다.”

－ 마녀사냥을 촉구하는

〈조선일보〉 김대중

송원재(전교조 서울지부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계가 아수라장이다.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쟁, 경쟁’이다. 모든 국민이 ‘경쟁 상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야 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한 명이 둔재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뜬금없는 말이 유행이다.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교육에서도 ‘경쟁’이 단연 으뜸 화두다. 시·군·구마다 특목고를 하나씩 만들겠다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그렇고,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중’과 ‘일제고사’도 그렇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시교육감에 재선한 공정택 씨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부터 경쟁시켜야 한다”고 엉뚱한 소신을 밝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성에 안 차서 더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거의 ‘경쟁 중독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잠깐 ‘경쟁’이란 말에 대해 생각 좀 해 보자. 원래 ‘경쟁’은 생물학 용어다. 원래 뜻은 ‘한 군집 내에서 살고 있는 다른 종이나 같은 종 사이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 개체들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을 뜻한다. 경쟁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그대로 인간사회에 도입한 것이다.

‘살고 싶으면 타인을 거꾸러뜨려서라도 네 몫을 챙겨라’ 하는 말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정한 룰에 대한 존중은 애당초 없다. 약육강식·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이다.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무한경쟁은 강자에게는 천국이지만 약자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 없다. 공정한 룰? 그만 건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을 보자. 일 년 교육비가 1천만 원에 육박한다. 한 달에 80만 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일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제중은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할 계획이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능력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조기유학을 다녀오거나, 아빠 따라 외국에서 장기 체류했거나, 유치원부터 영어몰입교육을 받아야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국제중은 강남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

일제고사를 보는 초등학생들 –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강요받는다

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기름통이 가득 찬 벤츠와 기름이 떨어진 마티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주를 한다고 치자. 누가 이길까? 묻는 사람이 바보다. 당근 벤츠가 이긴다.

사교육의 막강한 지원사격을 받는 부잣집 아이들이 명문고와 명문대학을 싹쓸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요즘 SKY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약 80퍼센트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 고급공무원의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다. 없는 집 자식들은 겨우겨우 입학은 했지만, 등록금 대느라 휴학을 밥 먹듯 할 수밖에 없다.

### 정글의 법칙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누구는 반만 된다. 아빠는 경제력으로 엄마는 정보력으로 대신 뛰어 준다. 없는 집 자식들은 혼자서 이 악물고 뛰어도 이길 수가 없다. 입시는 이제 더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간간이 들렸지만, 요즘 개천에는 용은커녕 이무기도 없고 지렁이만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게임의 룰이 무너져 버렸는데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것은 이미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무법천지에 가깝다. 그런데도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탈락한 다

수의 패배를 ‘네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요, 불공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머쥔 부자들의 특권을 정당화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쟁은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약자에게 가혹하게 불리한 규칙이다. 이제 지겹고 위선으로 가득 찬 ‘경쟁 놀이’를 끝낼 때가 왔다.

우리 나라 교육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이다. 있는 집 자식이든 없는 집 자식이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다. 그런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판을 벌이는가? 대다수 서민의 자녀를 찔통더위와 콩나물고깃살에 방치해둔 채 5퍼센트를 위한 귀족교육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효과도 의심스러운 ‘영어몰입교육’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못해 비인간적이다. 절망한 아이들은 벼랑 끝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데, 전국의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해 성적순으로 줄 세우겠다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가혹행위다.

뒤에서 밀어닥치는 기차에 쫓겨 숨이 턱에 닿게 달려도 살아날 길은 없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냥 철길에서 내려오면 된다. 누구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추만지 게임, 모두 함께 판을 접어 버리면 끝이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외치면 된다. “미친 교육, 너나 실컷 하셈!”

##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김영익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실을 통해 이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며 “북한 급변 사태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대규모 탈북 사태”이니, 이참에 “제3국뿐 아니라 우리 땅에도 탈북자 수용시설을 더 준비해야 한다” 하고 더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과 우익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들을 걱정한다고 해 왔는데, 이런 위선적 계획으로 본심을 드러내 버린 것

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난민수용소가 있는 제3국으로 가려면 위험천만한 국경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어 난민수용소에 수용된다 해도, 언제쯤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이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는 태국의 경우, 지금도 태국 이민국이 만든 수용소에서 탈북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받고 있다. 80평도 안되는 공간에 탈북 여성 3백여 명이 수용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병·눈병·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보장해 준 적이 없다. 게다가 이른바 ‘원정화 사건’ 등으로 탈북자들 중에 ‘간첩’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선별 심사와 검증 과정’을 핑계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장기간 방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조처는 가뜩이나 남한 사회에서 ‘2등 국민’ 취급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 심하게 할 뿐이다.

진보 운동은 이명박의 위선적 탈북자 정책을 폭로하고, 탈북자들의 조건 없는 이주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강동훈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그때 [IMF]는 기업부채가 4백 퍼센트를 넘었지만 지금은 1백 퍼센트 이하고, 외환보유액은 당시 경상지급액의 3개월[치]도 안 됐는데 지금은 6개월[치] 이상”이라며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MF 때보다 더 우려스러운 차이점도 있다.

1997년 위기의 진원은 당시 세계경제의 변동리인 동아시아였다. 타이에서 시작된 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거쳐 한국에 상륙했다.

반면 현재는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과 서유럽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서유럽의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주면서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는 미국과 서유럽 정부가 개입해 어떻게든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반면 최근의 위기는 막을 만한 정부가 없어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금융 위기를 낳을 만한 요인도 1997년과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거품이 꺼지자 호황을 구가하던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로 자금이 몰렸다. 당시 한국의 총대외채무는 3년 동안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설비투자에 들어갔는데 1994~1996년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은 17.1퍼센트에 달했다. 이런 과잉투자 속에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인 이윤율 저하가 전개됐고, 세계적 자동차·철강의 과잉생산 속에 수익성의 저

하는 기업들을 더욱 압박했다. 이런 껌새를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대규모 차입으로 투자에 나섰던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는 일부 대형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반면 이번에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 대출의 급증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 5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4백89조 6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주택 담보대출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금리는 급상승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대출해 준 80조 원에 대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거 부실 자산이 되고 있다.

## 단기외채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과 외환이 경색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악화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자동차·가전제품·반도체 등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석유 등의 원자

재 가격이 상승해서 8월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1백15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올 들어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4백25억 달러에 달해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를 합친 것만 해도 5백40억 달러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한국 자본주의와 수익성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1994년 39억 달러, 1995년 85억 달러에 이어 1996년에는 2백30억 달러에 이르던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됐다.

게다가 당시나 지금이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단기외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서로 대출을 꺼리면서 한국 금융기관들은 단기외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차입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만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단기외채는 2천2백23억 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이 86퍼센트에 달하고, 금융기관들은 초단기 대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혈관이 막히고 피가 마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중

국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에게 달러를 차입해 위기를 막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계속 위기로 빠지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해결될 가망이 거의 없으므로 이 방법이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금융 투기로 날린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낮은 이윤율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위기와 현재의 최대 공통점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급증으로 위기의 대가를 치렀다. 그 때문에 재벌·부자는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명박 정부도 종부세 등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물가 인상, 임금 동결,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경제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저들이 만든 위기의 대가를 우리가 또 다시 치러서는 안 된다. 재벌·부유층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할 때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통해서만 위기를 해결하려는 재벌·부자만을 위한 모순투성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전지윤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0퍼센트 정도인 밀바닥 지지율의 수령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영국 블레어는 지지율 26퍼센트에서 사퇴를 결정했고, 일본 후쿠다는 지지율 29퍼센트에서 사임한 바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 류근일은 “지난 7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기 싸움에서 계속 밀려 왔다. ... ‘아침이슬’에 그만 주눅 들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이명박의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종부세 감면에 대한 반대 여론은 83퍼센트, 국제중 설립에 대한 반대 여론은 71퍼센트에 이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이 벌어졌다.

더구나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이명박과 그의 기반인 재벌·부자 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기침하면 독감에 걸린다는 한국 앞에서, 미국 경제가 몸져 누워 버렸다.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몇 개월 만에 수십만 원이나 폭락했고, 해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32조 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미친 듯이 매달리던 신자유주의와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명박과 지배자들은 당황하면서도 계속 신자유주의에 매달리고 있다. 목표로 삼았던 섬이 가라앉는데도 배를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고 계속 노를 젓는 사람처럼 말이다.

사실 앞서 한미FTA 등을 추진하며 이 방향으로 배를 끌고 온 것은 노무현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최근 이명박과 만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약속했고 <조선일보>는 “세계 금융 위기 속에 대통령과 한 배 탄 애당” 대표의 결단”을 찬양했다.

이런 ‘동반자’들을 믿고 이명박은 임금 동결과 부자 감세 등 위기에 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 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도 계속하고 있다. 월 2만 5천 원의 관리비도 없어서 임대아파트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저들의 위기 해결을 돕거나 ‘고통분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재벌·부자들이 자초한, 저들의 체제 위기다. 저들의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정치적 대안과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지배자들의 혼란과 분열

칼 맑스는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부르주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난 목요일[9월 25일]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은 아수라장이었다.

공화당 우파 국회의원들은 “만약 우리가 돈을 풀지 않으면 이놈[금융시장]은 계속 추락할 겁니다”라는 조지 부시의 간청을 무시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중역 출신인 재무장관 헨리 폴슨은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에게 싸악 빌어 했다.

도대체 이 혼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지난 3주 동안 세계 금융 체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 헨리 폴슨이 월가(街)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방치한 것이 전환점이었던 것 같다. 이후 은행들은 서로에 대한 대출을 돌연 중단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 원인이 있다. 먼저, 은행들은 2000년대 중반 벌인 투기 도박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그 덕분에 은행들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부실 자산’ — 주택 활황 동안 창출된, [역면] 가치를 믿을 수 없는 금융자산 — 을 잔뜩 떠안았다.

폴슨은 7천억 달러를 들여 문제 자산을 사들인다는 계획을 의회가 승인해 주길 바랐다. 이것이 통과되면 은행 체제에서 문제 자산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백악관 회동은 이런 ‘부실 자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 계획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최악의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고 이 계획을 거부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매케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위해 과감하지만 의미 없는 도박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하원의 공화당 우파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반란이다.

그들은 1990년대 의회를 휩쓴 ‘공화당 혁명’의 산물이다. 그들은 부시가 20세기의 유산인 ‘거대 정부’의 물결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부시는 공공지출과 재정 적자로 늘렸다. 설상가상으로 부시는 공화당 상원의원 짐 더닝이 “금융사회주의”라고 부른 월가 구출 법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요동

사실, 그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AIG와 워싱턴뮤추얼 구제 계획은 사실상 [기업] 몰수로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폴슨은 미국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한 것이다.

또, 폴슨의 계획에는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는 현재 시장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은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은행에 돈을 공급할 거면, 왜 공개적으로 돈을 제공하는 대신 이 투자에 해당하는 양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가? 실제로 일요일[9월 28일] 발표된 타협안을 보면, 정부가 구제할 기업들 중 일부의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체가 요동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세계경제는 1979년 이후 가장 중요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1979년 미국 중앙은행장 폴 볼커는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탄생을 알린 가혹한 통화 긴축 정책을 취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국가가 지금처럼 과감하게 민간 부문에 개입한 선례가 없다. 시장의 규칙이 방해를 받는 현재 시장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은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폴슨의 계획이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누리엘 루비니의 철저하게 비관적인 전망은 계속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루비니는 “미국의 심각한 불황”이 “유로화 통용지역, 영국, 대부분의 선진 경제들”로 전파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수석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는 구제금융 계획을 위한 미국 정부의 추가 차입으로 “달러화 지지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말로 전환점이 틀림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 주요 국가로 번지는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의 핵은 미국에 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121호에서]

## 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는 은행·보험 업계의 대재벌인 포르티스에게 구제 금융 1백12억 유로를 지원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다. 독일 정부도 유럽 제2위 상업 부동산 대부업체인 히포 부동산주식회사에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

유럽연합 경제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독일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수출도 8년 만에 최저 성장을 겪고 있다. 독일 경제는 수출 덕분에 2000년대 초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영국·스페인에 올해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고, 유럽연합 다른 모든 회원국들도 운이 좋아야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 발표 직후 지난 20년 동안 금융 성장 덕분에 ‘유럽의 호랑이 경제’로 불리며 칭송받

았던 아일랜드 경제가 공식적으로 불황에 접어들었다.

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 동안 유럽 정부들은 중도 좌파와 중도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를 뒤쫓아 자유시장 정책을 펴 왔다. 이것은 누가 복지서비스·노동권·연금 제도를 삭감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지 경쟁하는 ‘밑바닥을 향한 경주’였다.

이런 정책은 반발을 샀다. 최근 오스트리아 유권자들은 사회당과 인민당(보수당) 간 ‘대연정’을 심판하는 표를 던졌다. 비록 사회당이 여전히 가장 많은 정당 득표를 기록했지만 극우 정당들도 거의 30퍼센트를 얻었다. 이것은 파시스트당인 자유당이 18퍼센트, 그 파트너인 ‘미래를 위한 동맹’이 11퍼센트를 얻은 덕분이었다. 자유당 지도자는 나치 문양을 합법화하고 SS[나치 친위대] 출신들을 기리는 행사를 열려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지지율이 높아진 반(反)이주민 우익 정당들이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식의 반발도 있다. 국제 경제 신문들은 한때 자신들의 복망이었던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재정적자 해소도 실패했고, 연금

과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 공격도 실패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학생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지난주 이탈리아에서는 노조 활동가 1백만 명이 우파 정부의 공격에 맞서 거리에 나섰다. 이것은 밀라노와 나폴리에서 발생한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일련의 임금 인상 투쟁에서 큰 양보를 따냈고 급진 좌파 정당인 ‘좌파’의 지지율이 사민당을 능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은행가·기업주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제대로 표출되도록 좌파들이 개입하는 데 실패했을 때, 파시스트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반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과 일본

세계경제 위기가 중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정책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인도 광석 수출업자들은 중국 철강 기업의 광석 주문이 5퍼센트나 하락했고 일부 중국 철강 기업은 심지어 수입 계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소비제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중국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금융권의 동향은 중국 금융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 만약 미국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중국 자본의 안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제2위 경제인 일본의 대미 수출도 자가용과 트럭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한 달 동안 22퍼센트나 줄었다. 동시에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도 줄고 있고 고유가로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일본 무역수지가 26년 만에 최초로 적자로 돌아섰다.

은행 구제가 아니라  
은행이윤 회수가  
대안이다

크리스 뱌버리

(〈소셜리스트 워크〉 편집자)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은행을 구제하면서 이윤은 가만 두고 부채만 떠안겠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시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에는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주로 강경 공화당 우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이 안이 “금융사회주의”고 “반(反) 미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스턴 금융 지역에서 사무실 청소부로 15년째 일해 온 폴 클렌시는 다른 이유에서 반대한다. “저들이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 저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곤경에 처하면 그들 중 아무도 저를 돌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부시 정부가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7천억 달러를 은행들에게 가져 넘겨주려는 것을 보고 두경이 열렸다.

이런 ‘월스트리트식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부유한 자들과, 많은 평범한 노동자·민중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 노동자·민중은 [자당을 잡힌] 자기 집에 쫓겨나고 자산단체인 운영자는 할인점에서 옷을 사야하고 때로는 끼니를 걸려야 한다.

부시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등 다른 주류 정치인들도 ‘월스트리트식 복지’에 찬성한 것은 입맛을 씹을하게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 3위 은행을 구제했다.

이런 구제 정책을 펴면 일부 기업들의 장부에서 악성 부채를 지울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고스란히 정부의 부채가 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시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의 ‘사’자도 꺼내면 안 됐다.

그러나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의 작동 방식이란 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장이 만든 문제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민중은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투자와 소비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체제, 즉 진정한 사회주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해야 한다.

전 세계의 부를 생산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계급이 이제 반격을 가할 때다.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정준남**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중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의 원 절반 이상이 중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센트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중부세 감면은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명박의 세금제

도 계약 시리즈의 서막일 뿐이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사치품 소비에 부과) 같이 부유층에 부담되는 세금들도 모조리 줄어들고,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도 깎아 주기로 했다.

법인세율도 앞으로 5년 동안 5퍼센트나 인하할 계획인데, 덕

분에 기업주들은 연간 6~7조원의 감세 효과를 보게 됐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서민이 누려야 할 복지 축소를 낳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생기는 매각대금도 부유층 감세로 줄어든 재정에 충당될 예정이 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노동자들의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봉급생 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7.5퍼센트,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는 13.7퍼센트나 오르게

된다. 특히,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고, 물가의 10퍼센트나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도 무려 9.5퍼센트나 오른다.

‘강부자’ 세금 줄이면  
경제 성장?

결국,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만 해도 1인당 9만 원씩 더 내게 됐다. 정부는 노동자·서민을 속죄양 삼아 부자들의 배를 채

》5면으로 이어짐

## 》4면에서 이어짐

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부자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활성화해 서민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교리’는 진즉에 파탄났다.

현 세계경제 파탄이야말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적 믿음이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부자 감세의 ‘경기부

양효과’는 거의 없다. OECD에 따르면, 흔히 법인세를 줄이면 재정지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장 효과가 미미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세를 2퍼센트 인하 등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보잘 것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복지를 통한 재정지출이 경제 회복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연구결과(한국조세연구원)가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 일각에는 정부의 감세에 맞서 세금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다. 북유럽 국가

수준의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자 증세

그러나 비록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 해도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들은 올해만 해도 1인당 근로소득세 2백3만 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4백36만 원씩이나 부담하는데 돌아오는 변변한 복지 혜택 하나 없이 허덕이

고 있다.

대안은 노동자·서민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더 줄이고, 재벌·부자·투기자본에게 대폭 과세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이명박의 조세제도 개악을 저지하고 이런 대안을 앞당기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사실, 법인세·중부세·양도세 감면으로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돈만 복지비로 써도 무상의료는 물론, 상당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

군비 증강과 해외 파병 비용 등에 낭비되는 막대한 돈도 서민생활 지원에 돌려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꺼져있는누리꾼모임’ 등이 이명박의 조세제도 개악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조세 저항 운동을 선포했고 ‘부자 증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현장 활동가들도 조세 저항 운동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9월 25일 이명박이 직접 주재한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숙박비와 식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의 무가입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예외적으로 세 번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조차 ‘경직’된 제도라며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또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선발 조건으로 기능 시험을 추가해, 한국 입국을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려 한다.

한마디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제 시절 노예 상태로 시계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 비용 절감

한술 더 떠 이주노동자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란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 ‘장기 체류로 인한 출산·의료·주거 문제’, 그리고 ‘노조 결성(즉 이주노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초(超)저임금으로 부려 비용을 절감하고 초과이익을 누려 온 기업들과 정부가 ‘사회적 비용’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처부를 드러내 온 이주노조 지도부를 연이어 강제 추방한 것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가담자’ 전원을 단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제노총, 국제엠네스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모두 이주노동자들



네팔 이주노동자 책의 그림 일기 — 그물총까지 동원하는 야만적인 강제 단속 추방을 고발하고 있다

의 정당한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조 해체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위해 올 10월에 법무부, 노동부, 경찰, 해경 등을 동원해 3백 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무자비한 인간 사냥을 합리화하려고 이주노동자를 ‘불법’, ‘범죄자’ 코드와 연계한다.

이것은 경제 위기와 관련 있다. 정부는 호황기 때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하지만 경제 위기 때는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아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실업의 주범, 복지 도둑,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

사회적 비용, 범죄 운운하며 이주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분노의 표적을 흐리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위선과 책략에 속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 후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야 한다.

## 살인적인 인간 사냥의 실태

9월 27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한 버마 이주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이 노동자는 공장에 쳐들어 온 단속반에게 붙잡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는 그가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금했고 그는 하루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8월 26일 부산에서는 밤에 자고 있던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기습적으로 쳐들어 온 단속반에 놀라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머리부터 떨어진 그는 안면과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을 일으켰고 전신에 심각한 골절을 입었다. 그러나 부산 출입국관리소 측은 치

료비도 책임지지 않았다.

경남 지역에서는 단속반이 가스총, 등산 스틱 등을 휘두르고,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도주라도 시도하면 무참한 폭력을 휘두르곤 한다.

8월 25일 부산 정관에서 단속된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단속 건수를 올리려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프락치를 강요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출입국관리소는 지금 인간 사냥에 미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 들어서만 1만 5천여 명이 추방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야만적인 인간 사냥을 당장 멈춰라!

##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끔찍한 현실

##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 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한다.

기본급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고 토요일 연장 근무에 일요일도 일하고, 평일 연장 근무까지 해서 식대 포함해 1백40만~1백50만 원 정도 받는다.

주·야간 교대 근무는 너무 힘들다.

입국 전에 밥값과 기숙사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와 보니 2명 살기도 비좁은 곳에서 5~6명이 살아야 했다. 겨울밤에는 너무 춥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더는 못 하겠다 말했다가 맞기

도 했다. 따귀 때리고, 발로 차고….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데서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실 계속 장시간·저임금 유지하려고 정부나 사업주가 공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방글라데시 노동자)

내 주변에 있는 한 이주노동자가 공장에서 한국인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사업주가 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해 버렸다. 결국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4대보험 가입이 사업주 의무지만

많은 회사들이 가입하지 않는다. 재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사업주들은 재계약 해주는 대신 본국에 갔다 온 후 퇴직금 주겠다고 하고, 임금도 2~3개월치 회사가 갖고 있겠다고 한다. 그런데 출국 후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사업주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지만 노동자들은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으니까 사업주에게 항의하지 못한다. 결국 돈 없는 가난한 제3세계 사람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나라스(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멜라민 파동이 드러낸 체제의 진실

박건희

수의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생한 환자만 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세계 각국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나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의 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람에게 요로결석과 신부전 등을 일으키고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게 확인된 물질이다.

멜라민 공포는 이제 과자·커피 크림·빵·초콜릿·아이스크림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식기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니 사람들이 “커피 한잔, 과자 한 봉지도 마음 놓고 못 먹나”라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4년에도 저질 분유로 인해 영아들이 머리만 커지는 대두증 사건이 있었고 이 외에도 폐사한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식용유, 공업용 광택제를 입힌 쌀, 포르말린에 절인 배추, 유황으로 말린 고춧가루 등 셀 수 없이 많은 쓰레기 식품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기업들의 이윤 보호에 더 관심이 있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저질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 멜라민 사건도 중국 당국이 최소 2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해 온 것이 밝혀졌다.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하는 것조차 금지해 버렸다.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고위층들은 “방목해 키운 내몽고산 쇠고기, 티베트산 유기농 차, 산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로 재배한 쌀” 등을 특별히 공급받아 먹는다는 흥흥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하고 말하는 이명박 — 이러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는가

이명박 정부도 멜라민 사태 대처에서 중국 공산당과 막상막하다. 중국에서 멜라민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식약청은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며 낫 놓고 있었고 뒤늦게 멜라민이 검출되자 이제는 “검출량이 소량이라 위험하지 않다”고 발뻠했다.

지난해 멜라민이 들어간 중국산 동물사료가 큰 문제가 됐을 때, 주중 한국대사관은 멜라민 식품의 국내 유통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3차례나 보냈으나 식약청은 ‘업계의 자율 검사 강화’만을 주문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자율 검사

이명박은 지난 26일 식약청을 느닷없이 방문해 “우리 나라는 식품 관련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고 호통을 쳤다. 이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

다. 왜냐하면 이명박 자신이 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8월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은 위생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던 한중위생약정을 ‘심각한 위반 사항이 아니면 15일 이후엔 수출 중단이 자동해제’되도록 대폭 완화해 줬다. 이산화황과 콜레라는 아예 검사 항목에서 삭제해 버렸다!

정부는 사태가 커지자 부랴부랴 온갖 식품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지난 7월에 ‘광우병 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이런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조차도 제대로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 식약관을 늘리려는 것도 이명박이 직접 ‘의미없는 행위’라며 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식품 검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위과학검역원의 인원을 올해 초 34명이나 줄인 바 있고, 식약청에서도 1백 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축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 이윤 체제

도대체 식품과는 아무 상관없는 멜라민이라는 공업용 물질이 어떻게 우리의 먹을거리 속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조직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다수의 기업들이 무자비한 경쟁을 하는 체제다. 경쟁에 뒤처지면 기업은 퇴출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에게는 최우선의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각 기업들은 가능한 싼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 비용을 줄이려 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규제는 이윤의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물과 멜라민, 유청분 등을 혼합해 우유 1톤을 가지고 50톤의 ‘쓰레기우유’를 생산해 냈다. 최근 폭로된 바에 따르면 아예 멜라민보다 더 값이 싼 질소비료를 우유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신자유주의’는 이런 논리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뿐이다.

결국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목숨과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앗아간 이 비극적인 멜라민 파동은 더 강력한 식품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이윤 논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보여 준다.

## ‘시민·사회 각계 원로’의 촛불 평가를 보고

9월 24일 백낙청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51명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 3개월을 “미완의 승리”로 평가하며 “비정규직” 쟁점을 추가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생적인 정책 전반에 맞서 “촛불을 끄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그때그때 필요한 현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얘기다.

그러나 이들은 촛불 항쟁을 평가하면서 “이명박 퇴진이 수사적인 구호로 등장했을지언정 퇴진을 위한 실력 행사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았다]”

고 했다. 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반성도 아직은 미진한 면이 있[다]”는 당혹스러운 주장도 했다.

그러나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6월 10일 이후 촛불 운동은 ‘반정부 운동’으로 발전했다. 요구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머물지 않고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경쟁 교육 등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반대로 확대됐다. 6월 10일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정권 퇴진 운동 불사”를 천명한 것도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은 집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명박의 지지율을 7.7퍼센트까지 끌어내렸고, ‘정권 퇴진’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잠재력을 ‘실력 행사’로 이끌기

보다 ‘제도권 수렴’ 등을 쳐다보며 주춤거리다 김빠지게 한 것은 바로 주요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힘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라는 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기존의 정당들이 지닌 잠재력과 현실적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슬기로운 방식”이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촛불 운동에 성실히 참가해 온 진보 정당들과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의료 시장화, 임시경쟁 강화, 물·전기·가스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정책 대부분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영준

##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조계사에서 촛불 수배자로 곳곳이 투쟁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이 촛불 2기 연대기구 출범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기구 발족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촛불시위에서 ‘정권퇴진 불사’라는 말을 사용해 보수세력에 빌미를 준 점”이 “큰 실수”였다는 평가는 아쉽다. 박원석 실장 자신도 말했듯이, 촛불시위는 단지 광우병 쟁점만이 아니라 이명박의 반서민 정책을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시위였다. 운동을 더 발전시켰다면 퇴진 요구를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었다.

진정한 “실수”는 대책회의 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퇴진 불사’를 걸어 놓고도 정작 실행에 옮기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촛불의 잠재력을 삭제 버린 것이었다.

최미진



# 불황과 계급투쟁

존 리즈는 트로츠키의 글들이 호황, 불황, 계급투쟁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사무국장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책갈피), 《저항의 세계화》(북막스) 등이 있다.

지난 주 조지 부시가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종말론에 나올 법한 연설을 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 줬다. 부시는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보여 준 눈부신 분석 능력을 이용해 경제 문제를 분석한 뒤, 은행 구제 금융 문제를 논의하는 사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돈 좀 풀지 않으면 이놈(금융시장)은 계속 추락할 거야.”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 주택 압류, 물가 상승, 임금 하락, 복지 삭감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자동으로 저항을 낳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분노를, 수동성이 운동을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간 관계는 무엇인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불황과 저항의 관계에 대한 가치있는 논평을 했다.

트로츠키는 불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계급투쟁이 상승한다는 기계적 사고를 거부했다.

물론 경기 후퇴가 저항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언제나 불황이라는 몽둥이세례를 받았을 때 반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노동자들은 정치적 무관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운동이 경제 위기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상황에서는 불황보다 호황 국면에 더 많은 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일자리가 충분히 노동자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장들과 협상에 임한다면, 불황 때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계급투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려면 어떤 요소들에 주목해야 할까?

트로츠키는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넓은 틀을 제시했다.

첫째, 트로츠키는 좀더 장기적인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호황과 불황 주기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트로츠키는 넓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경제 위기를 보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정부 체제·정당 정치의 위기, 특히 노동 계급의 의식과 전투성이 경기 후퇴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 맺는지를 봐야 한다.

불황을 빚줄기로, 정치 상황을 빚줄기가 통과하는 프리즘으로 생각해 보자. 어떤 프리즘 이냐에 따라 동일한 빚줄기가 굴절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제 먼저 장기적 자본주의 발전과 개별 불황 간 관계를 살펴보자.

트로츠키는 자신이 직면한 1920년 초 호황과 1848년 유럽 혁명 후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분석했던 호황을 비교 분석했다.

## 빚줄기와 프리즘

1850년대의 호황은 자본주의 장기 호황의 출발점이었다. 트로츠키는 “당시 자본주의 호황이 1873년까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자본주의 쇠퇴기였기 때문에 “호황도 잠깐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위기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졌다.”

트로츠키는 이 점을 이렇게 일반화했다. “경제 발전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기본 곡선은 생산력의 일반적 발전을 표현한다. … 전반적으로, 이 곡선은 자본주의 발전 역사 전체를 통틀어 계속 위를 향한다.

“그러나 이 기본 곡선의 상승모양은 불균등하다. 몇십년 동안 아주 근소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 그 뒤 몇십 년 동안에는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 … 다시 말해, 역사에서는 생산력이 완만하게 발달할 때와 신속하게 발달할 때가 있다.

트로츠키는 경제 위기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첫째 곡선과 불황·호황 사이클을 보여 주는 둘째 곡선을 “겹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두 번의 장기 발전 단계를 거쳤다.

제2차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자본주의는 사상 최장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불황은 심각하지 않았고 단기적이었다. 반면 건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됐다.

노동자 생활수준이 상승했지만 이윤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성장률은 크게 낮아졌고 불황의 고통이 갈수록 강해졌다. 이윤율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공격해서야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심각함의 정도는 달랐지만, 1973년,

1980년대 초, 1990년대 초, 1990년대 말, 2001년에 불황이 있었고, 2008년 현재에도 그렇다.

당면한 불황은 오랜 저성장 뒤에 닥친 것이다. 사실, 이번 불황 이전에 있었던 호황에서 미국의 실질임금은 4년 연속 하락했다.

많은 노동자에게 호황기 때의 ‘변영’이란 [저당 잡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신용 확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안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더구나, 이런 취약한 경제 체제는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자신의 쌍둥이 — 갈수록 불안정하고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계 국가 체제 — 를 가지게 됐다.

불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국가 간 갈등

을 악화시킬 것이다. 오늘날 불안정의 상당 부분은 경제 지위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아직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한 데서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제 트로츠키의 둘째 틀인 정치 상황과 불황 간 상호작용을 보자.

1973년 전후 호황이 종식되면서 정치도 크게 변했다.

영국의 경우, 생활수준이 성장하고 복지국가 제도가 확대되는 호시절은 1970년대 초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정부, 1970년대 말 해럴드 윌슨과 제임스 캘러한의 노동당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종말을 맞이했다.

그러나 진정한 반동 물결은 1979년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가,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하면서 몰아쳤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스주의를 대신해 지배적 경제 이데올로기가 됐고 복지국가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휩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최고 호황기인 1987년(위)과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던 1997년(아래)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 —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차량 폭탄 테러로 불길에 휩싸인 파키스탄 호텔 — 미국의 실패로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 순위의 복원을 마자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협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전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속시키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에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애져야 한다.

##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중과세해야 한다.

##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지역사회포럼

서울 북부 사회포럼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도 연합해야 할까?  
10/7(화) 오후 7시 30분  
인권실천시민연대 5층(한성대역 7번 출구)  
문의 010-5544-4285 / 참가비 2천 원

강동송파 사회포럼  
미국 대선—오바마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10/16(목) 오후 8시  
들꽃 향린교회(천호역 1번 출구) / 문의 02-2271-2395

동대문중앙 사회포럼  
오바마가 부시와 다른 미국을 만들 수 있을까?  
연사 조명훈  
10/23(목) 오후 7시 30분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 301호  
문의 02-2271-2395 / 011-9987-3600 / 참가비 1천 원



##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우리가 흠어져 있는 개인이라면 저항할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대중 행동에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은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제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www.alltogether.or.kr](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간

<저항의 촛불>을

##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_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_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http://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mailto: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예금주 백은진)  
048402-04-014849



# 영국 노동당 개혁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해부

김인식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토니 클리프와 도니 글룩스타인은 20세기 전체에 걸쳐 영국의 좌파와 노동계급 운동에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 노동당에 대한 신화를 갈로 버터 자르듯이 해부한다.

첫째,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신화.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은 “노동당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영국노동당 1백 년의 역사에는 여러 개의 ‘노동당’이 있다”거나 “혁명주의 분파들의 무능과 오류” 때문에 “개혁주의로 치달은” 것(이재영, <레디앙> 9월 24일)이 아니라 노동당은 시종일관 노동계급의 염원을 현존 사회 구조 안에서 충족시키려는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이런 시도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는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 없었다. 오히려 종교, 자유주의 그리고 페이비언주의의 혼란스러운 혼합물이었다. 노동당의 창립자 키어 하디는 단지 자유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나는 평생토록 자유당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키어 하디를 예찬하는 주대환이 최근에 노동자 독자 정당 노선을 폐기하고 민주당 ‘개혁파’들과의 연대를 표방한 것은 우연이 아닐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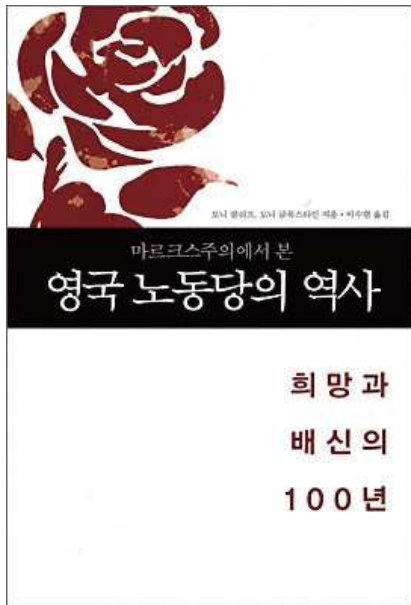
주대환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만들고 싶다는 페이비언주의는 철두철미 엘리트주의적 부르주아 전망을 갖고 있었다. 페이비언협회의 핵심 인물 비어트리스 웨브가 기술했듯이, 페이비언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유래했으며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국가 숭배, “천박하고 교양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멸에 찌들어 있었다.

둘째, 노동당이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의 정당이라는 신화.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당이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대변·지도·고무하거나 그 투쟁 속에서 적극적 구실을 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은 말한다. 노동당은 계급투쟁의 고양(1888년 이후 등장한 신노조 운동)이 아니라 패배의 산물이었다.

노동당은 현장 조합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 상간부층에 의해 건설됐다. 노동당은 언제나 계급투쟁에 대해 “정치 행동”(노동당에 투표하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립적 자세를 취했다. 이때 “정치 행동”은 직간접적으로 계급투쟁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셋째, 노동당이 사회주의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개혁주의 정당이지만, 그래도 보수당보다는 낫다는 믿음. 그러나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은 노동당의 개혁주의가 반드시 개혁을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1백 년 역사 동안 열 번의 노동당 정부가 등장했다. 그 중 애틀리 정부(1945~51년)만이 실질적 개혁을 제공했다. 나머지 노동당 정부들은 자신들을 지지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노동당은 노조 지도자들과의 연계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이용해 보수당 정부보다 종종 더 효과적으로, 덜 저항을 받으며 노동자들



##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토니 클리프 · 도니 글룩스타인, 책갈피

을 공격할 수 있었다.

넷째, 좌파가 노동당에서 헤게모니를 쥔 수 있다는 신화. 노동당 좌파는 자신들이 당을 혁명적으로(또는 왼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으로 노동당에 남아 있었다(민주노동당 분당 이전에 장식진(진보신당 정책팀장)이나 ‘해방연대’의 견해이기도 했다). 이런 희망은 늘 실망으로 끝났다.

노동당 좌파의 정치는 우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개혁주의였다 — 의회주의, 선거주의, 민족주의, 계급협조주의. 그래서 결정적 시기에 좌파는 언제나 좀더 일관된 개혁주의 논리의 대변자인 우파에 굴복했다.

조직적으로 좌파는 지구당에 기반을 뒀다. 지구당은 의원단과 달리 선거의 필요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들에 비해 자본과의 관계에 덜 속박받았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지구당은 노동당에서 가장 무기력한 집단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 냉엄한 사실주의 비판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의 노동당 비판은 부패 추문이나 내부 정보가 아니라 노동당 정치 기록에 대한 상세하고 정직한 조사에 근거해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거짓말”, ‘속임수’, ‘배신’과 같은 환원적, 주관적, 정파적 선악법을 남발하는”(이재영) 식으로 노동당 폭로에만 주력했다고 보는 것은 완전한 오독이자 곡해다. 그렇기는커녕, 이 책은 맑스주의 방법론을 사용해 “영국 노동당이 왜 개혁주의가 됐는지, 그 지도자들이 왜 대중을 배신했는지, 왜 배신자들이 더 많은 대중 지지를 얻어 당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제시한다.

이탈리아의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한 당의 역사를 쓰는 것은 특정 각도에서 계급투쟁의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은 시종일관 계급투쟁의 시각을 견지한다. 그

들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의 두 근본적 계급 간에 벌어지는 투쟁에서 노동당이 한 객관적 구실이였다.

저자들은 노동당이 근본적 모순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자본주의 노동자 정당”. 노동당은 부르주아 이해관계와 부르주아 사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통합할 사상을 채택하므로 노동계급 내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노동당 이데올로기에서 자본의 이익은 계급에 우선한다고 여겨지는 ‘국익’으로 포장된다. 이런 식으로 노동당은 국민을 이루는 합법적 구성 요소로서 노동계급의 요구를 표현한다. 그러나 “부분”은 전체에 종속돼야 하므로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무시한다.

이 책의 훌륭한 장점 중 하나는 역사의 시기마다 노동과 자본, 계급과 국민의 경쟁적 압력에 대처하는 노동당의 태도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호황일 때와 위기일 때, 노동당이 집권당일 때와 야당일 때, 노동계급이 후퇴할 때와 공격할 때 그 압력들이 어떻게 상이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압력들이 노동당의 두 기둥 — 당 관료와 노조 관료 — 에 상이한 영향을 미쳐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들 간의 근본적 상호의존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도 보여 준다.

이런 이해 덕분에 저자들의 노동당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빈약한 초좌파주의로 미끄러지지 않는다(한국에서는 ‘노동자의 힘’이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같은 급진 좌파들이 흔히 이런 오류를 저지른다). 배신을 거듭했음에도 노동당은 반동적인 당이 아니라 개혁주의 정당이다. 그 당은 일관되게 노동계급을 국가(또는 자본)에 종속시켰지만 노동계급과의 연계는 유지되며, 이것이 보수당(이나 자유당 또는 변종 사회민주당들)과 노동당을 근본에서 구별짓게 한다.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은 노동당의 배신과 실패에 대해 냉엄한 사실주의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노동당의 생명력이 끝났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저자들은 애틀리 정부 이래 노동당이 심각한 하강 국면에 빠져들었다고 분석한다 — 선거 기반, 당원 수, 활동가들, 심지어 매우 온건한 개혁을 실행할 능력 등에서.

그럼에도 노동당은 붕괴 및 보직전에 있지 않다. 비록 노동당의 개혁주의는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계급 다수의 모순된 개혁주의 의식과 계속 공존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계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사회를 건설할 자신감이 없는 한은 노동당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것이다.”

저자들은 개혁주의 의식과 노동당의 영향력은 오직 혁명적 의식과 혁명 정당의 영향력에 의해 대체될 때만 결정적으

로 분쇄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중적 개혁주의는 노동자들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져야만 사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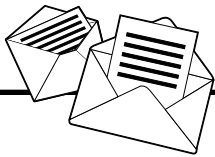
이런 자발적 투쟁은 개혁주의 의식의 대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혁명가들의 효과적 개입과 대중투쟁이 결합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불세비키와 코민테른의 공동전선 전술, 영국 공산당의 오류, 1970년대 후반 혁명가들의 반(反)나치동맹 건설 등을 분석한다.

이 책은 노동당과 개혁주의 행위를 지배하는 동력과 법칙에 대한 이론적 해설이다. 사회를 근본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논쟁과 교육에 매우 귀중한 도움을 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우경화에 고민하는 좌파 개혁주의 활동가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들을 배신하다 조기 사임한 토니 블레어. 그러나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이전에도 영국 노동당은 시종일관 자본주의 유지에 충실한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 경제 위기와 부서진 꿈

나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한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상황이 요즘과 사뭇 달랐다. 주식·펀드·아파트는 다시 한번 불패의 신화를 써 나가며 거품론에 쿡방귀도 끼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조차 언제 다시 집 장만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잡을까 전전긍긍하며 1억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값이 뛰는 곳으로 향했다. 한 달 이자 1백만~2백만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히도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울에 있

는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에게 어떻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이 회사에서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답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것이다. '45살까지 있으려나? 그 뒤로는 암흑이다.'

이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편승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집이라도 옮겨줘려면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제 그 꿈은 조각나고 있다. 희망이 무너졌을 때는 절망과 분노만이 남는다.

우리가 얼마만큼 고통을 더 감내하면 될까? 누가 그 고통의 양을 말할 수 있을까.

심호철

## 공무원 연금 개악을 지지해선 안 된다

보수 세력들은 공무원 연금개악이 소폭으로 진행됐다며 쓴소리를 내뿜었다.

그런데 〈경향신문〉마저 9월 25일자 사설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이 "아주 조금 더 걷고 아주 조금 덜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부담 고급여'가 연금기금 재정 적자의 원인인 듯 얘기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기금 재정 적자의 주범은 정부다. 문제는 정부의 연

금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정부의 부담률이 20~1백 퍼센트까지 되는데(미국 30.5퍼센트, 일본 16.45퍼센트, 프랑스 51.9퍼센트, 독일 47.1퍼센트) 한국은 7.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기금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IMF 이후 공무원 15만 명이 강압적으로 구조조정 당하며 '수입원'은 줄고 '연금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기금 재정 악화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종과세를 매기면 해결될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기업 노동자들보다 10퍼센트 이상 적고 연금 보험료는 두 배 정도 많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신포탄이요 '고통분담'을 위한 연금 '하향평준화' 시도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분담론'에 흔들리지 말고 이명박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전주현

##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저항의 촛불〉5호에 실린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강동훈 기자의 글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잘 꼬집고 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전교조를 비판하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쟁이 한창일 당시 대안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제시했었다.

전교조는 교과 성적 위주의 획일적 학생 평가를 반대했고, 다양한 특기 적성이 키워져야 하며 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운영에 교사·학생·학부모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이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교사 평가 방안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김성보(전교조 교사)

## 여전히 남는 아쉬움

김성보 동지의 지적처럼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논쟁이 한창일 당시 대안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제시했었다." 전교조의 이 정책은 지지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교조가 학생

들의 교사 평가를 흔쾌히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단적인 예로 2005년에 전교조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여기서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교사와 학부모는 동수로 하고 학생은 대표 1명만 참여시키는 것으로 때

학생들은 교원과 수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학사 운영과 학교 운영 전반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복의 형태에 대한 결정, 학교 예산의 배분과 집행 등 학생 참여를 새롭게 보장해야 할 영역은 학교 활동의 거의 전부다. 왜냐하면 지금의 학생들은 원천적으로 이런 결정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전교조에 아쉬움을 표시할 것이 있다면, 전교조가 자신의 대안과 폭넓은 학생 참여를 자신감 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일 것이다.

강동훈

## 2MB,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명박은 촛불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함성을 애써 외면해 가며 유모차 부대 — 국가에서 키워 주지 않는 아이들을 홀로 둘 수 없어 그저 데리고 나온 일박에 없는 — 까지 수사하는 등 자신의 두려움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여기저기 휘갈기는 이명박! 지금 청와대에서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있을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2MB 씨, 그렇게 두려우면 내려오세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힘을 쏟은 일, 바로 촛불 끄기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반의 반만 식품 안전에 쏟았다면 우리가 지금 뿔라민 공포에 떨릴 필요가 없었을 터.

우리 당신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촛불이 꺼지고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을 이명박에게 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윤지혜

정말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독자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신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다 실지 못하고 일부는 온라인에 게재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 고무적인 신문 거리 판매 경험

'다함께' 관악동작지회가 9월 25일 서울대입구역에서 진행한 가판에서 '이명박이 얻는 중부세 감면 혜택 2327만 원, 부자 세금은 깎고 노동자 임금은 동결?' 제호의 〈저항의 촛불〉6호가 1시간 동안 55부 판매됐다. 가판에 참가한 회원들 모두 크게 고무됐다.

최근 시간의 바쁜 지하철적이었음에도 시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월급이 반토막 났는데, 이명박은 임금을 동결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소수 2퍼센트 부자들의 세금은 깎으려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줬다.

신문이 55부나 팔린 것은 우리들이 자신감 있게 주장하고 다가가는 모습에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고 신문을 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가판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 했던 한두 사람도 감히 그러지 못하고 물러갔다.

좌파는 거리에서 꾸준히 대중의 자기 진작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많은 회원들이 가판에 참가해서 규모를 이루고, 자신감 있게 정치적 주장을 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박진화

## 아쉬움이 많았던 진중권 강연회

지난 9월 26일 나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성회와 총학생회가 주최한 진중권 교수의 '촛불과 한국사회' 강연회에 다녀왔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촛불 운동에서 나타난 대중의 자발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촛불 이후 이명박 정권이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그렇다면, 애 검찰과 경찰이 설칠까" 하고 옳게 비판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먼저, 그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하는 일도 없이 공연만 준비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중앙 무대를 만들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시민들의 참가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다함께의 "봉사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확성기와 집회 차량을 동원해서 시위를 이끈 것은 대중의 자발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함께는 5월 중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대중의 거리 행진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을 때, 운동이 좀더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뿐이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나중에 다함께 가판대에 찾아와 지지를 표시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이명박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만큼 유감스런 말이 없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물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려야, 이런 정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내가 만난 네티즌들이 "그때 이명박을 쓰러뜨렸어야 했다"고 아쉬워하는 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이명박 퇴진 구호는 다함께와 일부 시민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정말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진중권 교수가 '자발성과 지도'에 대해 주장하려고 한 성공회대 총학생회장의 발언을 막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끝낸 것은 매우 실망스런 행동이었다.

김재원

## 자이툰 철군 가능성과 반전 운동

〈저항의 촛불〉6호에서 장호중 기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언제든지 자이툰 철군 약속을 뒤집고 파병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고와 더불어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자이툰 철군 계획 발표의 배경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결합돼 있다. 우선 반전 여론의 압력이다. 이것은 반전 운동의 성과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존재했던 반전 운동은 철군 여론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고, 이 때문에 임기말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 추진에 부담을 느껴 이듬해 철군을 약속했다.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 전술 변화를



피하는 것과는 연관이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 군대를 빼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동맹들이 바

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얼마 전 대지동의 한 학원에서 학원비를 10분의 1로 속여 신고했다가 걸려서 강남·서초지역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곧 있을 예정이니, 강사들이 갖고 있는 서류 중 학생들 명단이 들어 있는 것들은 다 소각하라'고 말했다.

사실, "일반보습학원의 과목당 수강료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경우 대개 20만~30만 원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원을 매개로 이뤄지는 그룹별·개인별 과외는 거의 1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8월에 부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이 중요한 쟁점이 었다.

따라서 자이툰 부대(쿠웨이트의 수송 부대 다이만 부대도 포함해서)의 철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보인다.

자이툰 부대가 철군한다면 반전 운동의 승리다. 그러나 한국 반전 운동의 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점령이 끝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은 더 중요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 지원과 지역재건팀 파견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려 한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불러온 불안정성은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으로 연결됐다. 경제 위기의 심화는 제국주의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반전 운동이 여전히 중요하다.

김광일(촛불 수배자)

우리 학원도 비슷하다.

서울시교육감 공정책이 당선하자마자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런 고액 학원비가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퍼지고 있다. 내가 있는 학원도 이전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만 가르쳤는데, 최근엔 국어와 과학 등의 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폭등하는 사교육비를 막으려면 지금의 대학서열화와 경쟁 교육 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

윤필연

## 네팔에서 다시 만난 동지들

추석 연휴와 휴가를 겸해 네팔을 다녀왔다. 그곳엔 갖은 탄압에도 한국 이주자 운동의 역사를 끈질기게 일궈 왔던 사말타파·까지만·토르너·라주·검구릉 동지들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질 수도 없는 보석 같은 투사들이 있다.

네팔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먼지와 매연을 뒤집어쓰고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 젖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시커먼 개와 엉겨 길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들 등의 참혹한 모습이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그 폐허 속에서 이주노동자 동지들은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을



토르너(가장 왼쪽), 사말타파(가운데), 까지만(가장 오른쪽)

일삼는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죽음과 공포의 악몽만을 쫓을 뿐이다.

토르너 동지는 야만적인 단속 추방의 과정,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꿈에 불과했다. 동생 두 명은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고, 그나마 조금씩 부쳤던 돈은 맘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로 모두 써 버렸지만, 아쉽게도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동지들은 큰 20여 년간 청춘과 열정을 바친 한국에서의 투쟁 일화들을 풀어놓느라 밤새는 줄 몰랐다. 그리고 촛불 운동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기뻐했다. 그들은 깨진 코리아드림의 퍼즐을 고국에서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며 완성할 것이라 다짐했다.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모두가 이렇듯 파스한 동지애를 나누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전현정

## 누가 하면 통치 행위, 누가 하면 이적 행위?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한청을 이적단체로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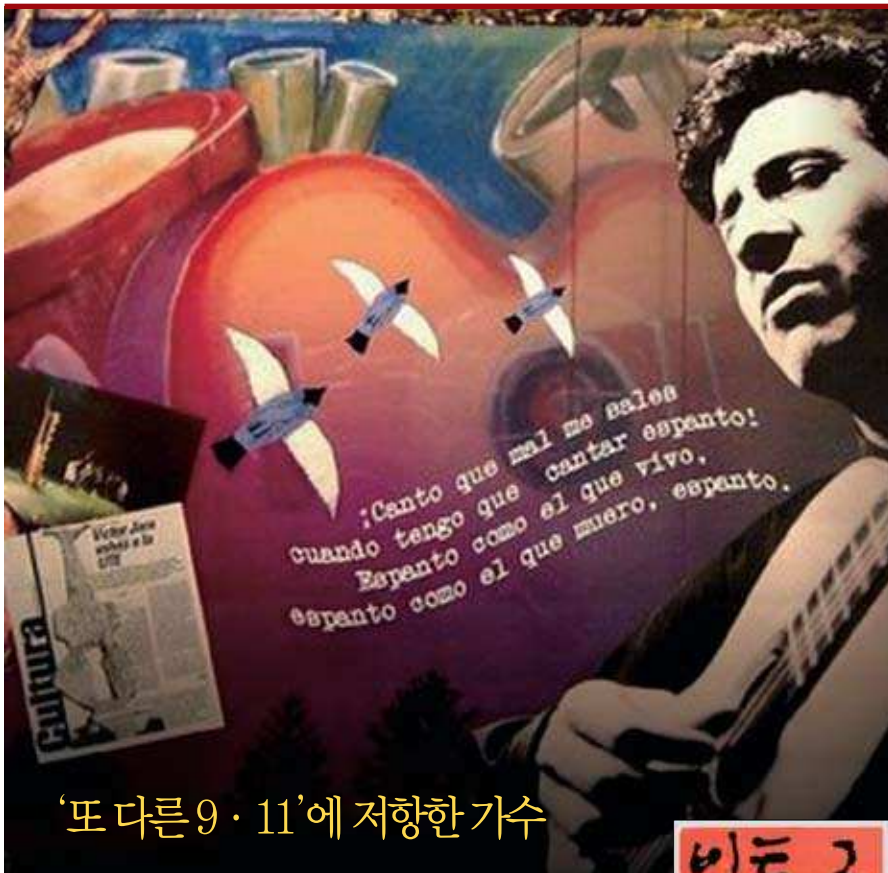
특이사항이라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결한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이 나온 뒤 얼마 안 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

해서도 대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간부 6명이 연행됐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을 합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0·4 공동선언을 합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처리 돼야 할 것이다. 한 쪽에서는 통치 행위가 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적 행위가 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열심히 투쟁하자!

이주형(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자평회통일국장)





‘또 다른 9·11’에 저항한 가수

# 빅토르 하라

《빅토르 하라 — 아름다운 삶, 끝나지 않은 노래》(조안 하라 지음, 삼천리)



김광일

춧불 수배자, 광주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아룬다티 로이가 ‘9월이여 오라’라는 에세이에서 지적했듯, 우리는 또 다른 9·11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73년 9월 1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피노체트의 쿠데타군 폭격기는 아옌데의 대통령궁을 폭격했다. 쿠데타군 탱크는 노동조합과 대학, 빈민가를 공격했고, 체포하고 납치한 수천 명을 실내 경기장에 몰아넣고, 그들을 다시 국립 경기장으로 끌고가 살해했다.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납치됐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선거로 뽑힌 아옌데 정부에 대한 쿠데타와 학살은 미국의 협조와 지원 아래 진행됐다.

칠레의 9·11 학살 그 외중에 노래로 저항과 혁명을 위해 싸웠던 빅토르 하라가 있다. 실내 체육관에서 손가락이 짓이겨지고 살해당한 가수가 있다.

《빅토르 하라 — 아름다운 삶, 끝나지 않은 노래》는 그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조안 하라가 쓴 빅토르 하라에 관한 기록이다.

빅토르 하라는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도시 빈민가 포블라시온 노갈레스에서 살았다. 그 자신의 성장기가 바로 칠레 피억압민들의 삶을 잘 보여 준다.

빅토르 하라는 신학교와 군대를 마치고 연극에 뛰어들어 연출자로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그에게 예술은 칠레 민중의 삶과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투쟁이었다. 민중들을 채집하고 민속춤을 연구하면서 연극에서 점점 음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 인민연합

빅토르 하라의 활동은 당시의 칠레 계급투쟁 상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쿠바 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1960년대 말 세계적 차원에서 저항이 확대되면서 칠레에서도 분위기는 고조됐고, 1970년 살바도르 아옌데가 인민연합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한다.

빅토르 하라도 바로 그 칠레 민중의 투쟁과 궤를 같이한다. 열성적인 공산당원이 됐고, 인민연합을 위해 자신의 노래와 재능을 기꺼이 저당 잡힌다.

그것은 단지 빅토르 하라만이 아니었다. 대학과 연구소 안에 갇혀 있던 예술가들이 거리로, 빈민가로, 노동자 집회로 향한다. 민중발레단이 창립되고, 예술가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호흡하려 노력하고 인민연합 정부를 위해 자

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빅토르 하라 등이 이끌었던 음악 운동인 ‘누에바 칸시온 칠레나(새로운 칠레 노래)’가 대표적이다.

빅토르 하라와 이들의 운명도 계급투쟁과 함께했다. 인민연합 정부가 최후를 맞이할 때, 그 또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이 평전은 빅토르 하라의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고, 당시 칠레 상황의 변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매끄럽게 번역된 빅토르 하라 주요 곡들의 가사를 음미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빅토르 하라의 음반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운 좋게도 빅토르 하라의 대표곡 몇 개를 MP3로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 (<http://www.nuevacancion.net/victor/mp3.html>)

그러나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질문이 생겨난다. 당시 칠레 상황에 대한 대안이 조안 하라의 개인적 견해만으로 종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민연합이 올바른 전략이었는가?

인민연합 정부 자체가 부르주아 일부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다. 게다가 쿠데타 직전까지도 아옌데 정부는 기독교민주당과 협상에 매달렸다.

이미 위기는 1972년부터 심화하고 있었고 쿠데타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그것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973년 6월 29일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때, 노동자들이 무장을 시작했지만 아옌데 정부와 사회당, 공산당은 무장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빅토르 하라 — 아름다운 삶, 끝나지 않은 노래》는 예술과 혁명, 예술과 사회에 대한 관점과 칠레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다.

이 책을 더 실감나게 읽고 싶다면 파트리시오 구스만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칠레전투〉 3부작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구》(알래스타어 포터필 · 마크 린필드 감독, 2007)

## 수십 권의 책보다 더 큰 호소력

극장이 어두워지고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영화 〈지구〉는 우리를 생명이 넘쳐흐르는 자연의 한복판으로 이끈다. 지구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들이 펼쳐는 장대한 생명의 드라마가 90분 내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50여 년 동안 자연을 다큐멘터리로 담아 온 ‘BBC 자연사단’이 5년 동안 2백여 곳의 현지 촬영과 총 1천 시간의 촬영 분량, 2백50일 간의 항공 촬영을 통해 담아낸 〈지구〉는 압도적 영상미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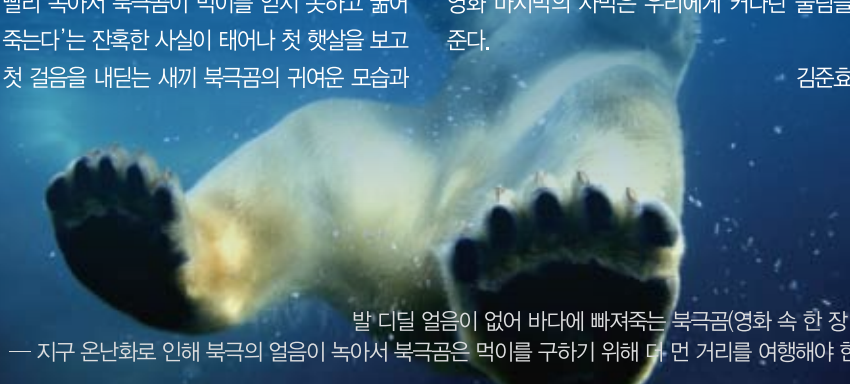
동시에 이 영화는, 지구 온난화의 해악을 극적으로 일깨워 준다. ‘높아진 기온 때문에 얼음이 빨리 녹아서 북극곰이 먹이를 얻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잔혹한 사실이 태어나 첫 햇살을 보고 첫 걸음을 내딛는 새끼 북극곰의 귀여운 모습과

겹쳐지면, 그것은 그 자체로 수백 편의 글을 갈음하는 호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약 당신이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원한다면 영화 〈지구〉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집요한 선동을 찾는 것도 무망한 일이다. 〈지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지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는 인간 외에도 다른 많은 생명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 그렇게, 〈지구〉는 미래의 세대들도 이 지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영화 마지막의 자막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준다.

김준호



발 디딜 얼음이 없어 바다에 빠져죽는 북극곰(영화 속 한 장면)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

《단절》(쑨리핑 지음, 산지니)



## ‘단절사회’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중국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에 관해 쓴 책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자는 1980년대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 이래 시작된 시장경제 정책이 중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한 학자다.

저자는 농민공이나 한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돼 더는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자 등 ‘약소집단’의 존재와, 이러한 ‘약소집단’의 노동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각종 횡포와 부패를 앞으로 중국이 발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이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약소집단’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저자는 지배자들이 고급 술을 마시면서 ‘황제’처럼 지낼 때, 시민들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굶어죽거나 고통을 당한 마오쩌둥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자·농민들의 아래로부터 행동보다 공산당 정부에 기댄다.

이는 그가 중국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보고, 공산당을 민주화해서 ‘사회주의 민주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 ‘신좌파’라는 데서 나타나는 한계다.

이들은 시장경제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으며, 노동자와 농민, 당 관료, 신흥 자본가 모두를 포괄하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중시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중국인민] 저자가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연구하고 썼다는 점 때문에 읽어 볼 만하다.

김재원(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학생)





# 비정규직 해고가 가톨릭 정신인가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사측이 해고를 자행한 9월 30일에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눈물범벅이 돼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해지 웬말이냐’, ‘비정규직 피눈물나게 하는 게 병원 맞나요?’라고 쓰인 팻말들을 들고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울부짖었다. “환자분들,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몹쓸 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작업복이 오늘은 꼭 수의처럼 느껴져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이면 이명박이 대운하 못 만들겠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로비 농성 돌입을 지지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나요?” 하고 묻는 환자,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환자, 자신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에 먹을 것을 하나 가득 담아서 절뚝거리며 지지 방문을 한 환자... 환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잘 알고 있다.

## 로비 농성

연대도 더 확대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대책모임’은 1백5개 단체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병원 벽에 부착했다. 해고되기 전 주말과 해고 당일, 병원 안에서 1백 명이 넘는 규모의 연대의 밤도 조직했다. 촛불 시민들도 가세했다. ‘강남촛불’은 밤샘 농성마다 함께 한다. ‘촛불네 티즌연대’는 아예 연대 텐트를 차리고 농성장에서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떠나야 했던 파견 노동자들을 포함해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한편 병원들의 수익성 경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다. 의료원은 9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1백1개 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구·면담 신청 모두를 거부했다. 또 해고 당일 온종일 로비 농성자들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의료원의 사주를 받은 서초경찰서는 경찰력을 투입하겠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주사기도 유효 기간이 3년인데 우리는 2년이다”

다고 협박했다. “노동자의 객관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은 ... 경제를 형성하는 ‘타당하고 근본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의 한 구절이 너무도 무색할 따름이다.

그러나 전망이 우울한가? 아니다. 우리 편에는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든

든한 사회여론층이 있다.(이것은 물론 기륭·KTX·코스콤·이랜드 노동자들이 일궈 놓은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지지와 연대를 광범하게 건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투쟁 승리의 열쇠는 보건 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 정규직 노조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말이지 수많은 투쟁 경험 속에서 산별노조를 세운 보건의료노조가 더 전면적으로 연대 투쟁에 나서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9월 30일 해고 노동자들이 노조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로비 농성을 시작했다라는 이유로 집중 집회 일정을 취소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해고 당일 뭐라도 하길 바랐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로비 농성 지지 집회를 개최했어야 했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하루빨리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를 보내다가 정규직 노조의 중요한 단협이 물건너 가면 어떡하냐’는 논리로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노무관리에 능수능란한 의료원 측의 교묘한 정규직·비정규직 분열 술책에 말려드는 것이야말로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며, 사측의 단협 개약을 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지와 연대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물음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돼야 한다.

김여진

## 연대의 목소리

## 고마운 내 동료들을 해고 말라

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보조사원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병원 측은 비정규직 간호보조사원들을 갑작스럽게 해고했다.

이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우선 환자들이고, 간호보조사원과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이다.

검사실에서는 환자 왜 안 보내냐고 간호사에게 닥달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그들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고, 이러한 불만은 같은 노동자인 간호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러다 의료사고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간호보조사원들은 간호사들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다.

신규 간호사로서 모르는 게 많았고 힘들어 울면서 일하는 나에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던 동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안됐어, 말이 가톨릭이지...”, “정말 그분들 너무 좋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 다시 일했으면 좋겠다.”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일 끝나고 한 톨이를 하며 나오는 얘기들이다.

병원 측은 혹시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질까 봐 간호사들에게 ‘농성장에 가지 말라, 관심도 갖지 말라’ 하고 당부했다. 내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러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자 수간호사가 직접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 함께 일한 동료들이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정규직 노조가 이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 주길 바란다. 하루빨리 이들의 투쟁이 승리해서 함께 웃으며 일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유혜린(강남성모병원 정규직 간호사)

## 촛불은 계속된다

##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관악 촛불문화제

9월 28일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촛불 사진, 조계사 테러, 뉴라이트 실체, 조중동 폐간, 경제 위기 등 여러 사안을 다룬 각종 홍보 전시물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촛불집회 동영상이 나오자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시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한편에선 시민들의 논쟁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몸자보를 두르고 홍보 전단을 나눠 줬다. ‘민영화 반대’ 노란 풍

선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고 촛불 보디페인팅도 진행했다. ‘다함께’ 회원들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지 모금을 하고 서명도 받았다.

연사들의 발언에 경청하고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도 많았다.

시민들이 기대 이상으로 참가하고 관심을 보여 우리에게 큰 힘이 됐다.

마포, 강남 촛불, 안티 이명박 등도 함께한 가뭇에 단비 같은 뜻 깊은 문화제였다.

유용상

## 자신감과 활력이 넘친 은평의 촛불

지난 9월 28일 은평구에서는 “이명박은 물러나라”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1백여 명의 촛불들을 볼 수 있었다. ‘아고라 은평’의 네티즌들과 민주노동당, 전교조, 은평시민넷과 ‘다함께’ 등이 함께 ‘촛불탄압 경제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매주 화요일 촛불문화제에 전경 버스 3대와 형사들을 배치하고, 최근에는 ‘아고라 은평’ 카페지기와 지역단체 대표를 소환해 촛불을 위축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날의 다채롭고 활

력 충만한 집회와 행진은 그런 경찰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렸다.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와 개신교 목사, 이랜드 노동자와 전교조 조합원 등이 발언자로 참가해 흡사 광화문의 촛불집회를 옮겨놓은 듯했다.

시민들은 행진의 넘치는 자신감에 놀라워하면서도 반기는 기색이었다. 학원의 학생들은 창문 밖으로 “미친 교육!”을 외치면서 연대를 보여 줬다.

김종환



# 실천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최미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간부 4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고문·조작으로 악명 높은 국가정보원이 실천연대 수사에 직접 나섰다. 그래서 이번 마녀사냥에서도 모든 일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간첩단인 것처럼 몰아세운다. 조중동 등은 실천연대가 김영삼과 황장엽을 암살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기 시작했다. 북한 민화협 관계자가 실천연대 회원과 대화 중에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실천연대의 암살 시도로 부풀려졌다.

통일부의 지원을 받는 남북 민간교류의 공식적 창구인 민화협을 통해 북한 민화협 관계자를 몇 차례 만난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회합’으로 둔갑했다. 남한의 많은 진보 운동 단체들이 지지하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야유회·돌잔치 사진 등이 올라와 있는 실천연대 집행부 게시판은 ‘지령을 전달하는 비밀방’으로 둔갑했다.

실천연대 일부 간부들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간첩의 증거인 양 제시됐다. 그러나 좌파 활동가들이 이런 보안 수칙을 만든 것은 모두 공안당국이 미행, 전화·이메일 도·감청 등 불법적 사찰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공안당국이 수년간 이메일과 내부 게시판을 모두 훑어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공개돼 있는 실천연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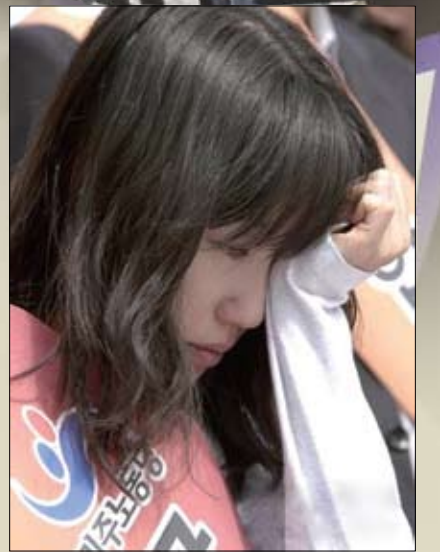
식 메일로 해외 동포가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보냈다는 것과 실천연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있는 북한 지지 글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로동신문> 기사는 대학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북한 지령’을 공개 이메일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문제가 된 자유게시판의 글들도 실천연대 회원이 쓴 것이 아니다. 자유게시판의 글이 단체의 입장과 일치하든 아니든, 내용을 검열해 삭제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실천연대는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을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른 진보 운동 단체들도 삭제 명령에 불응하기로 공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마녀사냥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송두울 교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일심회’ 구속자들이 간첩단을 결성한 것처럼 떠들었지만, 재판에서 간첩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송두울 교수도 거물 간첩으로 부풀려졌지만, 재판에서 간첩 혐의는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그러나 이미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뒤였다.

실천연대가 또다시 이런 마녀사냥의 속죄양이 되지 않도록 진보진영 전체가 방어를 나서야 한다.



지난 9월 27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위),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실천연대 구속자 최한옥 씨의 부인(아래)

## 탄압에 맞서 공동대응을 강화할 때

**실**천연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소속 단체로서 촛불 운동에 함께해 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설창일 변호사는 “실천연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 보수단체 등에 의해 촛불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고 했다. 실천연대가 2000년에 결성된 이후 이미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건을 터뜨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촛불이 대변한 이윤지상주의 반대 정서가 아직 광범한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다행히 이명박의 탄압에 맞선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실천연대 활동가들이 무더기 연행된 지난 9월 27일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단체들도 이 집회에 함께 참가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집회는 향후 이명박의 탄압에 맞선 연대를 확대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다. 이 집회를 계기로 공동전선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

실천연대 탄압을 규탄하는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도 매우 폭넓은 단체들이 참가해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동당은 ‘촛불탄압대책위’를 결성해 실천연대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대는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반대는 11월에 예정된 노동자대회와 같은 중요한 대중 집

회에서 주요 요구로 채택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12월 1일을 맞아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이 건설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운동에는 촛불 운동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들도 동참해야 한다.

한편, 최근 민주당 ‘촛불탄압대책위’도 실천연대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안탄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의 막가파식 탄압이 민주당조차 반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당시 민주당에 의존했다가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이나, 바로 2년 전에 ‘일심회’ 마녀사냥이 민주당 정권 때 벌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경계해야 할 ‘덤’일 뿐이다.

## 등록금으로 돈놀이하지 말라



학교 당국의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주요 대학들은 그동안 적립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왔다.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갖고 도박을 벌인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부풀려서 등록금을 인상시킨 뒤 돈을 남기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쌓아 왔다. 매해 등록금 인상액의 1.5배가 넘는 돈을 적립한 결과, 현재 사립대학 적립금의 규

모는 6조 원이 훨씬 넘는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03년부터 함께 삼성 YES펀드를 만들어서 현재 3천억 원에 이르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교 발전기금 2천억 원의 약 60퍼센트, 고려대는 적립금의 25~35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펀드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서강대 재무팀장은 “등록금이 들

어오면 그날 바로 쪼개 투자한다”고 말할 정도인데, 서강대는 적립금의 90퍼센트를 금융 투기에 사용했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적립금의 주식 투자를 합법화하면서 대학들의 돈놀이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최근 펀드·주식이 폭락하면서 많은 적립금이 공중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각 대학당국은 구체적인 운용 내역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세대 학생들은 펀드감시단을 만

들어 대학 당국에 적립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5일 만에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대학생들이 매달 버거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거나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는 현실에서 수천억 원대의 적립금이 도박판에 쓰이고 있는 것은 정말 원통한 일이다. 대학 적립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선영